

참여정부와 언론

■ 차례 ■

1. 새로운 시대의 권력과 언론관계
2. 시민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언론권력, 민주주의 가로막아
3. 언론의 권력화 막는 데 최선 다할 것
4. 기자실 개혁은 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 새로운 시대의 권력과 언론관계

□ 정부와 언론의 긴장과 견제관계는 건강한 것

참여정부는 우리 언론에 대해 긴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건강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본분이므로 정부와의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50회 신문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2006. 4. 6)

지난날 정치권력과 방송과의 관계가 적절치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권력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따라 국가발전, 사회의 진보를 위해 서로 협력, 견제하는 관계로 잘 발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간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을 비교해 보면 정치권력은 통제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언론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 상호 간, 언론사 내부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토론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이야말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정확한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신성한 것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비판입니다. 비판은 잘 하라는 비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냉정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사람을 갈라 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말을 가공하고 전달하는 분들은 좀더 깊이 생각해서 갈라치고 불신하게 하거나 증오하고 싸우게 하는 정보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인정해 주고 대통령의 직무를 존중해 주면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2003. 9. 3)

□ 새로운 시대 언론의 책임

말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들 합니다.

2002년 한국언론재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직업군 조사를 보면 언론인이 1위였고, 정치인은 5위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방송은 말을 가공하고 배급하고 말을 지배합니다. 정보를 지배하는 것이 막강한 권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2003. 9. 2)

다양한 거버넌스 사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권력이 언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언론은 비판만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회의 방향결정에 기여하는 만큼 언론도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언론도 견제 받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권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사회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서 책임을 생각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에서 2005. 10. 25)

정부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배구조는 투명해졌으며 참여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공론의 장에서 의제를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일도 그와 같은 주체도 없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네티즌, 신문과 방송이 함께 의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문은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짜여진 조직입니다. 제도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정부보다 취약하지만, 국가나 공동체의 의제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시민사회 이후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역할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강조되었지만, 언론 자체가 시장의 독점과 독점적 지배구조를 통해 권력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나 시장의 매커니즘은 크게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 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언론인의 윤리적인 자세와 절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신문은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한 지배집단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치우친 언론이 시장을 지배하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설 땅을 잃게 됩니다.

(제58차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2005. 5. 30)

□ 비판과 견제를 기본으로 창조적 경쟁과 협력 관계로

정권과 언론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비판과 견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또는 분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가는 것을 위해서 비판과 견제라는 수단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권의 힘이 월등할 때에는 언론도 비판과 견제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정보가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파헤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권력의 절대적 우위가 있지 않고 정보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지키기는 해도, 그러나 그것만이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깨어서 지키기는 하되 뭔가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대안의 경쟁도 하고 방향에 대해 논쟁도 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창조적 경쟁과 협력의 관계가 설정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그 수준까지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가 보자는 것입니다.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2005. 8. 18)

2. 시민권력으로부터 떨어진 언론권력, 민주주의 가로막아

□ 공정한 사실 보도, 책임 있는 주장해야

참여정부는 나아가 정부가 언론을 견제하는 힘겨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우월한 힘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권위주의 시대나 초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기관과 시민사회에 권력이 분산되고, 그중에서도 언론

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진 사회에서는 언론 스스로 횡포가 가능한 우월적 권력이 되지 않도록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소비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함께 해야 할 일이지만, 각기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사의 정확도와 분석·비판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단순한 갈등 관계를 넘어 선의의 경쟁과 창조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신문에게 공정한 사실,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공정한 사실을 주문하는 이유는, 우리 신문이 근거 없는 사실을 함부로 보도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지만, 때때로 파편적인 사실은 맞으나 사실의 불공정한 취사선택으로 전체적인 사실은 부정확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는 이유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듯한 보도나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주장과 비판으로 사회일반의 인식과 여론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고 이끄는 데 언론만큼 영향력 있는 주체도 없습니다. 신문이 우리 사회의 과제와 미래를 공정하고 책임 있게 제시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때,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들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신문이 사회적 공기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0회 신문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2006. 4. 6)

□ 비판과 문제제기도 민주사회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될 필요

모두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비판하는 것도 보장된 권리지만,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 것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각자의 권한도 존중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된 의사표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비판도 받아야 하지만 존중도 받아야 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항상 합리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인정해 주고 대통령의 직무를 존중해 주면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잘하라고 부탁 하나 드립니다. 잘하라고 꾸짖는 것은 달게 받는데, 일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비판은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2003. 9. 2)

□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 시대의 기운으로 일어나야 할 문제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시대의 기운처럼 일어나야 할 문제지 정부가 정책을 내 놓고 깃발을 흔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정책을 내야지 기사실 바꾸고 오보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책망하는 분들이 있으나,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전선을 확대시킬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긴장관계가 돼 어렵더라도 작은 노력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것이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만큼은 원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불편하더라도 돕는다는 기분으로 해 줬으면 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한국의 취재문화는 이렇구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2003. 4. 7)

3. 언론의 권력화 막는 데 최선 다할 것

□ 감시받지 않는 언론권력이 불량상품 생산, 소비자 타협해선 안 돼

지금 소비자 주권이 행사되어야 할 과연 그런 산업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어디지요? 내 생각에는 미디어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과 다른 엄청난 많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빌렸는지 출처도 불명한 의견이 마구 나와서 흥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배상도 없습니다.

우리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장차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분야가 저는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생산자, 감시받지 않는 권력자,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소비자 행동으로만 제어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인터넷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가 이 언론 집단에게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만한 집단에서 소비자 노릇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량 상품은 가차 없이 고발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나쁜 것이 유착입니다. 유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경제점검회의에서 2007. 1. 4)

□ 사실은 바로잡아야

강자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므로 공직사회가 강자의 카르텔에 참여해선 안 됩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겐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강자에게 약해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권력과 언론이 강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입니다.

적절한 방어는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일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는? 마찬가지로 잘못됐으면 피곤하겠지만 반드시 고치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더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왜 언론과 싸우느냐고 합니다.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싸울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끼리 대통령을 적당히 홍보는 건 괜찮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제 잘못이 있다면 제게 먼저 말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때때로 억울한 비판을 많이 하므로 밖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시정해 봅시다.

(차관급 공직자 대상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워크숍에서 2003. 5. 3)

언론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요구하고 사실의 왜곡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오보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해서 오보를 만들어 내는 구조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정책홍보 기준은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서비스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취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의무는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자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정책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오보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공직사회의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기 정책에 대해 대응체계를 갖추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정책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에서 2005. 10. 25)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을 운영하면서 사실 꼭 이것까지는 안 싸워도 좋다 싶은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바로 잡는 일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읽거나 말거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은 밝혀서 역사적 자료로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 참여정부는 언론권력 바로잡는 데 최선 다할 것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부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과는 사뭇 다른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보신 내용이라서 많이는 왜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일부 신문을 보면,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로 배포한 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소비자 권력, 언론 소비자 단결해 시장 지배권력 횡포 맞서야

언론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트렌드 2010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경영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깨어 있는 소비자가 기업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 네트워크로 더 보완하고 오늘의 인터넷이 그런 기능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소비자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불량품 추방은 가능하지만 독점과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시장의 구조를 제어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운동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 있는 소비자, 더 나아가서 깨어 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은 전통적으로 권력의 주체입니다.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요. 정치의 소비자, 이 말은 그러나 분명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로서 시장을 제어하고 또 정치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시민 하면 재산과 교양을 가진 제3계급을 의미했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시민,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투쟁, 깨어 있는 시민을 말했습니다.

현대의 시민은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 시대의 시민과 같은 시민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온라인 시민참여 저널리즘은 정치와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보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제를 부각시키고, 네티즌의 열린 토론 속에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발전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도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은 정책현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더 가깝게 소통하는 핵심적인 국정 인프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언론의 수준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기사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책임있는 비판으로 언론의 정치권력화를 견제해 나갈 때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참여언론 간의 활발한 연대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임기를 마치면 시민주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세계시민기자포럼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2007. 6. 28)

□ 언론 개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렇게 모든 언론과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내내 참여정부가 해 온 다른 일들도 그래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언론과 언론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별 출입처 관행에 안주하며 생산하는 기사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 스스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언론계 내부로부터 고민과 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에서 2007. 6. 7)

□ 언론은 권력, 권력은 절제해야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6공 말기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노태우 정부가 버림을 받고 거세되고 몰락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각제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각제 합의의 공개가 마치 무슨 큰 부정인 것처럼 매도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언론의 힘이 강하구나 느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언론 관리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그 달인이 마지막에 새로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도록 거세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에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추락과 노무현 정부의 고난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간에 언론이 권력이라는 점만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각료 공직 후보자들이 언론의 올바른 문제제기에 의해서 낙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는 지적의 보도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언론에게 감히 옳소, 옳지 않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언론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가 총리 자리를 그만두고 6월 12일 한 언론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공직이나 정치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절대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나는 오늘 말하겠다, 그렇게 하고 언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의 권력이 아니라 언론의 선정성과 언론의 무책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같은 자리가 있다면 언론권력의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권력은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추사에서 2007. 9. 3)

□ 특권과 유착구조의 청산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언론 개혁의 일정 단계가 우리 정권의 역사적 책임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이 일을 버리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1987년 이후, 20년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성립된 정부입니다. 공포정치와 철권통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지만 공작정치의 의혹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그동안에 끈질기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그것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적 과제입니다. 부정부패, 유착, 권위주의,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기회주의, 정치 문화, 원칙의 붕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하거나 적어도 일보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이었습니다.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소한다는 이 과제와 관련해서 정치권력과 소위 통치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저는 말끔히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권은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론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추사에서 2007. 9. 3)

언론개혁의 제1차적 과제는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

니다. 제일 첫번째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감히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남은 문제는 시장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주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언론 스스로의 각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의 두번째 과제는 유착구조, 특권적 지위의 청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날의 유착 구조 속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일부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다.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끔히 청산되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두번째 과제를 가지고 참여정부와 언론이 숙명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결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손잡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할 수 없다면 양심과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추사에서 2007. 9. 3)

4. 기자실 개혁은 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기자실 개혁 문제는 대통령 지시로 하는 일

요즘 언론이 기자실 개혁 문제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언론제도는 국가발전에 아주 중요한 제도이므로 책임 있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여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송고실도 두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

편할까 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 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도 있습니다.

(제23회 국무회의에서 2007. 5. 29)

□ 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입니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2차 개혁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 주면 다음 정부에서는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 가판, 자전거일보까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하고 정리해서 넘겨 주기 위해 제2차 브리핑 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왜 유독 언론만이 부당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만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부당한 이익을 주장합니다.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시절, 5공시절은 기자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만 있었을 뿐 아닙니까?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까?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

아쓰기, 귀동냥에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기자실 개혁,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정책 기사의 품질 높이기 위한 것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즉 기자실 개혁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정책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한 부처에 국한된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되고,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부처 기자실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잡한 정책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숨어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처별 출입처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부처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부처의 브리핑 내용, 이른바 관계자의 비공식 견해, 기자실 내부에서 오가는 정보 등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의 취재 관행은 언론사와 기자들 간의 경쟁을 가로막고 비슷비슷한 기사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기자실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시각마저 부지불식간에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런 환경에서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일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환경을 바꾸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여론과 정보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이제 사회는 언론이 가는 쪽으로 갑니다. 언론의 수준만큼 갑니다. 지금은 언론이 정치권력의 압력이 무서워할 말을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론자유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는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입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온 것도, 이번에 기자실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긴장관계 위에서 신뢰경쟁, 품질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일시적으로 힘들고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에서 2007. 6. 7)

□ 정부도 정책 품질과 정책 홍보의 수준을 더 높여야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더 수준 높은 정책을 만들고, 더 설득력 있게 정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 브리핑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 도입할 온라인 브리핑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크게 나아졌지만 정보공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별 출입처 관행이 유지될 때보다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고 깊이 있고 책임 있는 정보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도 늘고 새로운 일도 생기겠지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또 박또박 챙겨 나가면 국민과 언론도 이러한 변화를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번 기자실 개혁은 정부와 언론 모두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

다. 당장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이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한 것은 그냥 언론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와 정책의 품질, 민주주의와 공론의 수준을 선진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훗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에서 2007. 6. 7)

□ 정보공개 확대는 노력하고 있는 중

정보공개 건수가 국민의 정부 5년간 26만 3,000건이었는데 참여정부 4년간에 45만 2,000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공개정보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십시오.

전자 브리핑은 접촉 차단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계 없이,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합니다. 그 문제는 선진화 방안과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정보 공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담당 부처하고 기자협회 간부 나와서 T/F 만들자고 하면 협의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기자실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라든지 취재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 줄 생각 없습니다.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2007. 6.17)

□ 반론과 공론기능 외면한 채 언론탄압 정부로 몰아

저의 주장도 공정히 보도해 줘야 합니다. 저도 A1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국정브리핑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 방송들은 전혀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면 그 사회의 공론이 다 표출되게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언론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론의 장에 모두를 다 올려놓고 공정하게 뛰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국이나 되며, 그 기자실에 대한 선진국 기자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놓고, 같이 갑론을박하는 것을 통해 이 사회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들의 사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라도 이 말을 해야겠는데 말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보도가 될까요?

(PD연합회 20주년 축사에서 2007. 8. 31)

□ 괴롭고 힘들지만 그만둘 수 없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 힘든 일을 내가 시작했는가,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없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역사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발전의 숙명적 과제 속에 저와 언론이 이 시점에서 만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만났고, 이 조우를 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2007. 9. 3)